

# 민주당, 李 선고날 대규모 집회 예고 국민의힘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野,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 등  
1심 선고 앞두고 ‘李 무죄’ 호소 총력  
與, 긴급대책회의 열며 적극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된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시켰고,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 혁신회의가 지난 8일 시작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원인이 지난 11일 오전 8시 40분 기준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가 있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방탄’, ‘판사갑박 무력시위’라고 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에너지가 이런 곳에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토요일에 예정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11개 학교, 23일 11개 학교 이렇게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짜증나고 싫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죄 판결 시 재판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도 서법수 사무총장께서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꼼수악법 막아낼 것”

민주당, 내일 본회의 제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안에서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모양”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날치기 강행 처리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농단”이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점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법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적 특검법 수정안 추진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 국민께 사과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얇은 꼼수가 아니라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홍 기자

## 與 “반도체 R&D 인력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완화해야”

###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AI·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서 고려해야  
김문수 고용부 장관 “올바른 방향”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당이 전날(11일)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AI(인공지능),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때 연구분야나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 TSMC나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이 부분을 예외로 허용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며 “노

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법안은 검토해야 하지만 (제외) 폭을 너무 넓게 해서 52시간 근로제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주거나 확대되는 느낌을 줄 때는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안된 것은 노사 양쪽에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野,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감세 해당”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중산층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방안은 지금 정부법안엔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이 안은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에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야당의 막혀 원안 대로의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였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의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면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화이트칼라 이그젠션(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과 관련해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